

2. 부산의 해안경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공학과 김 나 영
지도교수 이 한 석

부산의 연안은 대부분이 산업 및 수송공간으로 활용되어 도시민의 접근이 어렵고 수변 친수 공간으로서 어메니티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해안경관을 비롯한 해안환경의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안개발의 수요는 더욱 증대하고 있지만 연안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가 매우 미비하다. 특히 연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연환경이며 해양자원인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해안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해안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안경관관리에 성공적인 외국 연안도시의 해안경관관리 제도 및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부산의 해안경관관리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먼저 국내 연안도시의 해안경관관리를 살펴볼 때 해안경관관리를 위한 통합된 법제도가 없이 도시계획분야, 연안관리분야, 환경보전분야로 나뉘어 해안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연안도시에서 해안경관관리제도를 살펴보면 해안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이 지구의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와 지침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방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부산의 해안경관관리는 경관관리가 각각의 관련법에 의해 분화되어 여러 행정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어렵다. 또한 해안경관이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해안경관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해안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해안경관은 육지의 경관과 바다의 경관이 어우러져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연안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안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해안경관관리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인 해안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안경관의 특성에 따라 해안경관관리지역을 구분하고 그 안에 해안경관보전지구, 해안경관회복지구, 해안경관계획지구를 두어 지구별로 관리하며 지구별 해안경관계획과 해안경관 디자인지침을 조속히 세워야한다. 또한 부산시와 해안을 끼고 있는 구청에서는 해안경관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해안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해안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개발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안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